

아베의 정치진로와 한일관계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아베의원이 전후 세대로서는 첫 총리가 되었다. 9월 20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가 자민당 의원과 당원들의 66%에 달하는 지지를 받아 총리로 선출되었다. 당초 자민당 총재선거는 전 관방장관 후쿠다의원이 아베에 대항마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면서 정치적 노선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후쿠다는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아시아외교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아베의 강경보수노선과 격돌할 것이 예상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7월말 후쿠다가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아베의 독주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미 7월말 단계에서 아베의 승리는 반이상 보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 총재선거에 나선 아소외상이 속한 고노파, 타니가키가 속한 타니가키파를 제외하면 거의 자민당내 모든 파벌이 아베를 지지하는 거당적 지지태세가 확립되어 갔다. 아베로 보자면 이러한 사태진전은 한편으로 총재선출을 확실히 해주는 안전판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항하는 유력주자의 상실로 인해 모든 파벌에게 신세를 지는 묘한 입장에 섰다.

고이즈미가 총리로 당선될 무렵, 고이즈미는 자신을 개혁파로 부각시키고 자신의 노선에 반대하는 이들을 '저항세력'으로 명명하면서 구태의연한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는 공약을 내걸 수 있었다. 고이즈미에게는 야당과 자민당내 저항세력이라는 이중의 적을 상대해야 했지만, 그가 수장으로 당선되는 순간 그가 추진해야할 일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아주 확실한 것이었고, 집권기간 내내 그같은 약속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베는 후쿠다의 도중하차로 인해 자민당내 파벌들의 총체적인 지지를 획득함에 따라, 당내의 전선구축에는 실패했다.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당내 도전세력의 부재는 역으로 아베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는 9월 26일에 이루어진 조각에서 자신의 노선과 차별화된 타니가키파를 제외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거당내각체제를 구축하였다. 나카소네 전총리는 이를 일컬어 '안전운전 거당내각'이라고 명명했다. 자신의 팀컬러를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당내 각 파벌과 족의원을 대표하는 전문가적 명망가들을 내각에 포진함으로써 당내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운전만으로 내각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베총리는 고이즈미 시대이래 강화해 온 총리관저 주도형 정책결정방식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종래 2명이던 총리보좌관을 5명으로 늘리면서 자신의 최측근의 한명인 세코의원을 홍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관방장관과 더불어 아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세코를 통해 일원화된 정책이미지의 창출과 적극적인 홍보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다. 관방장관에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정치적 동지인 시오자키를 임명하여 일사분란한 정책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종래에는 각 부처들이 추천하던 총리비서관들을 공모를 통해 모집함으로써 아베총리의 노선에 충성하는 관료들을 관저로 모이게 했다. 아베총리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대처를 통해 일본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출 필요성을 자각하고, 향후 일본판 NSC를 관저내에 둬으로써 대외정책 및 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분석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고이케 안보담당 보좌관이 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반 조치들은 내각을 통해 의원내각제적 화합정치를 구사하는 동시에, 총리관저의 기능강화를 통해 대통령적 상명하달과 지휘명령체계를 확보하려는 아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즉, 고이즈미가 자신이 선호하는 각료들을 파벌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명함으로써 파벌의 혁파를 단행하고자 한데 반해, 아베는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여당과 절충과 타협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제멋대로 총리’였던 고이즈미와는 달리 아베는 여당인 자민당의 안정적인 운영도 고려에 넣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에 끌려다니거나 관료들에 휘둘리는 정책결정을 막기 위해 총리관저의 스태프들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톱다운(top-down)방식의 의사결정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총리관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베총리의 고민은 고이즈미의 개혁노선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고이즈미 총리와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아베는 사실상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볼 수 있으며, 고이즈미도 퇴진 직전까지 아베의 후견자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이즈미가 추진한 개혁노선의 계승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구조개혁없이 성장없다’는 고이즈미의 주장은 아베정권에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개정과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도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노선을 연장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베수상은 고이즈미총리가 남겨놓은 부(負)의 유산을 정리해야만 하는 과제도 안았다. 아베가 주장하는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은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양극화현상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려는 ‘따뜻한 보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가 무엇이 나쁘냐’고 강변하던 고이즈미식 논리를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통해 회복해 보겠다는 것이 아베의 뜻이다. 사회 양극화보다 훨씬 더 일본사회를 갈라놓은 문제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싼 논쟁이며, 이 문제의 저변에는 일본의 아시아외교의 실패가 놓여있었다.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어디까지나 일본국내의 문제이며, 야스쿠니문제를 과거사와 결부시켜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한국뿐이라는 논리를 통해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싸우는 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서로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않다고 할 만큼 뒤틀려진 한일 정상간 관계에서 대표되듯, 일본의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다. 따라서 아시아외교의 복원은 아베에게 주어진 숙명적 정치과제였다.

아베가 고이즈미수상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고이

즈미 총리 밑에서 관방장관과 간사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한 아베는 늘 고이즈미의 그늘에 가려있는 존재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이즈미의 개혁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아베의 약속이 더욱 고이즈미와의 차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가 집권하면 추진하겠다는 정책이슈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헌법개정문제는 그 기반이 되는 국민투표법만 통과시키기에도 시간이 걸릴 만큼 한 정권의 과제는 아니다. 아베 자신이 헌법개정까지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문제도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어서 정치적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쉽지않은 문제이다. 아베는 재정적자의 해소와 관련하여 소비세 인상문제는 '피하지도 않고 피해나가지도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2007년 참의원선거가 지나고서야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즉 소비세 인상문제 또한 단기적인 정책과제는 아니다. 제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문제도 시간을 요할 뿐더러 정책부서간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같이 보자면 아베총리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고이즈미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분야는 외교안보분야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고이즈미가 무너뜨린 아시아외교의 정상화라는 과제는 절대절명의 숙제였고 이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고이즈미와는 다른 이미지 구축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아베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한일, 중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막후교섭에 나섰고,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냈다. 아베로 보자면, 10월 22일로 예정된 오사카와 가나가와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정치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국내정치적 필요성도 있었고, 10월 13일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외교적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중국과는 10월 8일, 한국과는 10월 9일이라는 일정에 합의하고 수상 취임후 첫 방문지를 아시아 주변국가들로 정했다.

한국이나 중국으로 보아도 고이즈미 집권후반기 냉각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된 입장의 표명이었다. 아베는 총재선거에 나설 것을 결심한 이후 줄곧 '야스쿠니에 간다고도 가지 않겠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였다. 아베에게 있어 야스쿠니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대한 배신이자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하지만 야스쿠니에 가겠다고 공언하면 뒤틀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에서 아베는 지난 4월 야스쿠니에 비밀리에 참배했다는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이 신사참배를 유보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이나 중국이 볼때 이러한 입장표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아베에게 다른 정치적 선택이 없다는 현실성을 인정하고 일단 아베를 받아들여 향후 야스쿠니 참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일, 중일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아베의 신사참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아베가 신사참배를 한다고 하면 외교적 실

패의 책임은 일본에게 있고, 그때가서 일본을 비판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아베 자신이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약간 접어두고, 한중 양국은 과거사와 관련된 정면공격을 약간 접어둠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중국과 한국과의 신뢰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고이즈미와는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베총리가 한국을 첫 방문하는 10월 9일 아침, 아베가 서울에 도착하기 약 30분전쯤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아베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노무현대통령의 역사강의에 대한 시간할애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공헌하였다. 아베는 북한이 고백한 납치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의 어쭙잖은 납치문제의 대응으로 인해 성장한 정치인이었다. 납치문제가 부각되기 이전 아베는 평범한 정치적 귀족이었지만 납치문제가 세간에 부각되면서 그는 일본인의 안전을 가정 걱정하는 납치문제의 해결사로 인식되었다. 아베가 후쿠다와의 경쟁이 예상되던 시점인 7월초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아베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주었다. 일본의 언론은 이를 빗대어 '김정일의 아베 지원사격'이라고까지 비아냥거렸다.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면 야스쿠니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아베와 후쿠다의 경쟁은 더해 갔을 지도 모른다. 더구나, 아베가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시키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자, 이번에는 핵실험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이 아베를 일본내에서 확고한 외교적 수완가로 정착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베는 한일정상회담의 주제를 북한핵문제로 유도할 수 있었고, 회담이 끝난 직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공조 약속을 어필할 수 있었다. 북한핵은 양국 모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베는 일본에 귀국한 후에도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환경보호 이외에도 북한을 경유하는 모든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 등 대북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10월 13일 각의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미사일발사 직후와 마찬가지로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달 유엔안보리의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신을 높이는 한편, 북한문제에 대한 강경책을 선도함으로써 일본 국내적으로 아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조성에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베총리는 단기적으로 외교안보문제를 중심으로 고이즈미시대와는 다른 일본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할 것이며, 정치적 과업의 성공적 달성도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아베의 등장부터, 성장, 그리고 정치적 과업수행을 가장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긴요한 것이다.